

민주 광주·전남선대위, ‘지역 투표율 90%’ 총력전

유세 대신 ‘찾아가는 경청 선거운동’
텃밭 호남민심 ‘싸늘’ 위기의식 작용
지방의원 등 유권자 민원 메모 작성
광주 직능단체 39곳 등 지지 이어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가 ‘투표율 90% 달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다. 직능단체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각 지역 선대위는 골목 단위 유세와 주민 간담회 등 맞춤형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교체와 민심 결집을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광주선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광주 지역 39개 직능단체 총 1만5018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수완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고 이날 광주 문화예술인 3250명도 ‘광주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지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유세 대신 ‘찾아가는 경청 선거운동’을 택했다.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들이 골목을 돌며 유권자 민원을 듣고 ‘경청노트’에 기록한다.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설명하고 민심을 직접 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출마 당시 기록한 호남 투표율 최고치(92.4%)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광주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

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였다.

이번 총력전은 최근 지역 민심의 흔들림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영광군수 보궐선거와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잇따라 고전하면서 ‘호남 텃밭도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은 전략지구로 지정해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2동이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39.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지역 주민 10여 명과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동산·지역개발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봉선2동 일부 주민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22일에는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 평균보다 낮은 80.2%의 득표율을 기록한 나주시 빗가람동에서도 간담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는 ‘영호남 화합합동유세’도 열렸다. 주철현·권향엽 의원, 김경수·김두관 전 의원 등이 총출동해 “분열과 혐오를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유세 현장에서는 ‘남행 열차’와 ‘부산갈매기’에 맞춘 퍼포먼스와 함께 양 지역 선대위원장이 태극기 퍼즐을 맞추는 장면도 연출됐다.

원외에서도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더민주광주혁신회의 투표참여 시민운동본부는 ‘말보다 강한 목소리, 투표로 들려주세요’ 캠페인을 전개, 1700여 명의 회원들이 대학·유원지·종교시설·터미널 등에서 출근길 유세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직이 결집할수록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압승 같은 표현은 금지한다”며 “선부터 낙관은 투표율 하락과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도 끝까지 절박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30%만 마음을 열면 민주당 독점 정치에 마집표를 찍을 수 있다”며 “경쟁 없는 정치 탓에 국회의대·광주공항 이전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호남이 정치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도 “젊은 권리당원이 많은 봉선2동에서 30% 득표를 따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겠다”고 전략지역 공약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건 ‘90% 투표율’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직적 결집의 이면에 ‘일당독점 폐해’라는 회의론도 공존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 남구와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는 ‘보수 짝어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감이 크다”며 “90% 투표율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 독점 지역’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내 고향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투표율 90% 이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광주 서구 능성2동 사전투표관리관과 장비담당사무원들이 21일 광주 상공회의소 강의실에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통신망 점검과 통합명부시스템 접속 및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기업도시 세제 감면’ 전남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도 건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영암·해남…재산세 등 세율 낮춰

전라남도가 영암·해남에 조성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대한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 일인 6월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2025 장흥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2025년 5월28일(수) 오전 11시~12시

•장소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일원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지만 문명의 발달, 인구증가 등으로 해양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살아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다살리기에 적극 관심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주최

전라남도

장흥군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